1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여야, 추진속도 놓고 격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
민주당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
국민의힘 "절차 무시한 속도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10일 맞붙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인 만큼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을 속도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중요성만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열린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지난 1일부터 예비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 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말했다.

조 의원은 "심지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무안군 주민 찬반 투표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에선 2030년에 반도체 양산이 가능할지, 이러다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관 장관은 "주민께선 착공하고 땅을 파는 것이 가시적인 것으로 보겠지만,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용수를 어떻게 하고 기업들은 팹(반도체 생산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는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들이 이번 달 안에 대충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팹이 건설이 되고 2030년 상반기 중엔 양산이 들어가는 계획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첫 팹은 2030년에 첫 양산이 시작되고 그 계획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최근 들어서 기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전혀 없고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30년에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저는 사실 전당대회용인 줄 알았다"며 "정부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나. 지금 주식시장 요동치는 게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메모리 기술 개발 소식 하나에 삼성전자 주식이 곤두박질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믿고 확신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총 10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안 되는 사업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광주 군공항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고, 법상 후보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하려면 주변 지역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주민 투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 낸다

적용 범위·구체적 평가 기준 이견
다음 의총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현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증여·상속세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지배주주 등이 낮은 주가 또는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거나 이를 활용할 유인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주가 평균으로 평가해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8월 개편안에서 지난 8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가 업종별 하위권에 머무른 기업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적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활발한다.

이훈기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를 막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에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자는 취지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선 여야의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시장 참여자가 가진 문제 의식을 잘 알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양수도될 때, 새로운 인수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해 일반주주에게도 지분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안의 정우 '전체 지분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것이 반발을 불러왔다.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에게 지분을 먼저 사버리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공개매수 물량은 '10%p(포인트)+1주'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총에서 관련 내용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불발'

이르면 17일 공포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공포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의 권한과 임명 방식, 법무부 장관의 인선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심의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총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사권 부여 문제와 특검 임명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상황에서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불법 알박기' 전국 조사 지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 등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알박기' 등의 행위를 지적하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처하고, 온라인 스캠·마약·불법사금융·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며 "그중에 이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종부세 완화 놓고 진보 정당·시민단체 반발

"강남·마용성 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은 10일 기본공제 상향의 혜택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부자 감세 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의원실 분석 결과는 이번 감세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혜택은 강남에 쏠린다.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은 최소 약 5만7000호 중 71%가 강남구에, 87%가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21억원 이상 주택 85%도 강남3구에 있다"며 "강남3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를 한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